

한-EU FTA 정식 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윤성욱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

- I. 이익만 있고 피해는 없다(?)
- II. 협상의 본질에 충실한 한-EU FTA 협상
- III. FTA 원칙에 대한 고찰

지난 2007년 5월 6일 당시 EU 통상집행위원인 피터 만델슨(Peter Mandelson)은 일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국과의 FTA 협상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약 3년 6개월만인 2010년 10월 6일 양측은 협정문에 공식 서명을 함으로써 발효를 위한 비준절차만 남겨놓게 되었다. 사실상 양측은 2006년 5월 한-EU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처음으로 양측 간의 FTA 추진 가능성을 논의하였고, 같은 해 7월과 9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예비협의를 개최하였다. 결과적으로 내년 7월 1일 한-EU FTA가 예상대로 (잠정)발효되면 논의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에 현실화 되는 것이다.

지난 10월 6일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날, 대부분의 일간지 1면 머리기사는 한-EU FTA 정식 서명이었고, 장밋빛 전망이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었다. 물론 한-EU FTA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분석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인구 5억에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6조 4,500억불 규모의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자 중국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인 유럽의 27개국 시장이 개방된다는 점이 경제적 효과 분석의 시작점이다. 물론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도 한-EU FTA 서명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충분하다. 현재 FTA 재협상 등의 문제로 보류중인 한-미 FTA 비준, 특히 미국의 행정부 및 의회의 비준 처리 문제와 관련한 입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11월 11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FTA 쟁점 사항 - 자동차, 소고기 등 - 에 대한 최종 합의를 위해 실무협의 및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한-EU FTA 정식 서명과 연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동차, 가전 및 기계 등의 산업 등에서 연간 30억 불 규모의 시장을 한국에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¹⁾ 아울러 Wall Street Journal 도 'Seoul Outmaneuvers Tokyo, Again' 의 기사에서 한-EU FTA 발효는 일본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의 홍수 속에서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과연 ‘한국은 왜 EU와 FTA 협상을 시작하려고 했을까?’ 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Wall Street Journal의 기사 제목처럼 일본을 다시 이기기 위해서 EU와 FTA 협상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은 수출에 달려 있다는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가 세뇌 수준으로 온 국민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고,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과 시장 점유율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과도 같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의 교역국으로서 경쟁국들과의 수출 순위 싸움을 통해 그 순위를 한 계단 또는 몇 계단 끌어 올리는 것이 FTA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FTA 체결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결과적으로 FTA 발효에 따른 효과를 통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FTA 체결에 따른 이익만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설득을 통한 국회 비준을 위해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절차이지만, 그만큼 피해산업에 대한 무관심은 점차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I. 이익만 있고 피해는 없다(?)

한-EU FTA 발효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후생 증대는 여러 부분에서 관찰될 수 있다. 한 예로 방송 및 통신 분야의 개방에 따라 박지성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의 위성 중계료가 인하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이 인하될 수도 있다는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관세청이 발표한 한국 소비자 10대 선호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를 보면 한-EU FTA가 대국민 홍보 측면에서 가지는 설득력을 쉽게 알 수 있다(표 1참조).

<표1> □ 남성선호 10대 물품

품 목	총수입규모 (백만불, 09년)	EU/총수입 (%)	실행세율 (%)	철폐시기	관세혜택 (억원)	발효즉시가 적용률(%)
포도주	112	57	15	2011 “즉시”	122	17.7
신 발	294	25	13	2011 “즉시”	123	12.5
가죽벨트	26	69	13	2011 “즉시”	30	12.5
셔츠	70	10	13	2011 “즉시”	11	12.5
스카치위스키	189	100	20	2014 (3년)	482	8.6
가 방	147	22	8	2011 “즉시”	33	8.1
넥타이	18	88	8	2011 “즉시”	11	8.1
꼬 냐	7	100	15	2016 (5년)	13	4.5
필터담배	11	1	40	2026 (15년)	3	2.7
선글라스	79	76	8	2014 (3년)	61	2.2

* 연간 관세 혜택금액은 ‘09년 평균환율 1,277원/\$ 적용

□ 여성선호 10대 물품

품 목	총수입규모 (백만불,09년)	EU/총수입 (%)	실행 세율(%)	철폐시기	관세혜택 (억원)	발효즉시가격인 하(%)
손목시계	2	4	8	2011 “즉시”	0.1	8.1~9.6(고가)
핸드백	388	73	8	2011 “즉시”	289	8.1
스카프.머플러	14	67	8	2011 “즉시”	9	8.1
귀금속	143	36	8	2014 (3년)	52	2.2~2.6(고가)
향 수	75	91	8	2014 (3년)	69	2.3
메이크업화장품	50	40	8	2014 (3년)	21	2.2
입술화장품	35	52	8	2014 (3년)	18	2.2
눈화장품	15	47	8	2014 (3년)	15	2.2
기초화장품	402	40	8	2016 (5년)	164	1.4
페이스파우더	19	51	8	2016 (5년)	10	1.4

* 연간 관세 혜택금액은 '09년 평균환율 1,277원/\$ 적용

(출처: 관세청, ‘한-EU FTA 발효시 EU산 선호물품의 가격인하 효과’)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해당 제품의 총 수입 중 EU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면서 많은 품목에서 고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 예: 포도주 17.7% 즉시 철폐, 신발 12.5% 즉시 철폐, 핸드백 8.1% 즉시 철폐 등 - 수입품에 대한 가격 인하는 소비자에게 크게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 한-미 FTA 협상시, 그리고 앞으로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는 경우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쌀 등과 같은 농산물에 대한 개방 압력도 없었고, 한-미 FTA 당시 입장이 침예하게 대립되었던 분야나 소위 ‘독소조항’ 이라고 일컫는 조항 - 예를 들어 ‘스냅백(snap-back) 조항’ - 등도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다.²⁾ 대외경제연구원(KIEP)를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자료에 따르면 EU와의 FTA 체결에 따라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 최대 5.6% 증가, 25만여 명의 고용 증가, 수출은 연평균 25억 3000만 불이 15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수입도 연평균 21억 7000만 불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 상품의 가격 인하와 소득 증대 효과로 인해 후생수준이 GDP 대비 3.8%, 약 320억 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장밋빛 경제 이익의 전망 속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EU FTA 서명 이후 발표된 한국과 EU 양측의 향후 전망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다.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는 국회 비준, EU 집행위는 EU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경제적 전망을 발표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³⁾ 그러나 똑같은 FTA 협상을 두고, 게다가 동일한 CGE 모형(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사용하였음에도 서로에게 유리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무심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European Commission DG Trade)이 발표한 ‘한-EU FTA를 통한 EU의 10가지 주요 이익(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10 Key Benefits for the European Union)’에 따르면 EU는 농산품 및 공산품의 관세 철폐, 자동차, 의약품, 의료기기, 전자제품 및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비

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시장 접근 향상,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에서 이익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⁴⁾

그 중 관세철폐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평균 관세(12.2%)가 EU의 평균 관세율(5.6%)보다 높기 때문에 한-EU FTA가 발효되었을 때 EU측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고 전망하고 있다. EU의 대 한국 수출은 82.6%가 증가하는데 반해 한국의 대 EU 수출은 38.4%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8년 기준 한국은 EU와의 교역에서 약 138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EU FTA 체결을 통한 상기 EU의 전망이 맞다면 EU는 한국을 상대로 향후 최대 101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 이는 한국측이 한-EU FTA 체결로 연평균 무역 흑자가 3억 6천만 불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너무나 상반된 입장이다. 그동안 한국은 EU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평균 관세율보다 높아 EU와의 FTA 체결은 경제적으로 더욱 이익이 많다는 주장을 펴왔지만, EU 집행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한국의 관세율이 높아 - EU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철폐를 통해 16억 유로, 한국은 11억 유로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 -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는 EU측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한-EU FTA 협상 중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EU 입장에서)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철폐 -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전기전자, 의약품 등 - 로 인해 관세철폐 효과는 더욱 높아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EU가 특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경우 EU측에서는 성공적인 협상 분야로 꼽고 있으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돼지고기, 위스키, 낙농제품에 있어 관세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은 동 품목들에 대한 EU의 대 한국 수출이 협정 발효 20년 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⁶⁾ 영국의 Financial Times(2010.10.08)도 협정 발효 3년 이내에 EU 기업은 190억불, 한국 기업은 130억불의 가치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측하고, 결과적으로는 유럽에 이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상기 한-EU FTA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또한 주목할 부분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국책 연구기관들의 발표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로 2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전망하고 있지만, EU의 전망은 한-EU FTA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이라고 보고 있다.⁷⁾ 물론 EU보다는 고용 부분에 있어 더 높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특정 분야 - 예를 들어 섬유, 가죽/의류 부분에 고용 창출이 기대되지만, 한국의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적고, 자동차 분야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반면에 낙농, 축산, 기계류, 전자 부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한 고용 감소가 전망 -에서 고용 증가와 감소가 상쇄되어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GDP의 경우에도 향후 10년간 5.6% 증가한다는 한국측 전망과 달리 EU는 0.08%, 한국은 0.8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I. 협상의 본질에 충실한 한-EU FTA 협상

국제통상협상은 자국의 통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 간에 통상갈등 발생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국들 간에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agreement)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통상 분쟁 해결도 궁극적인 목적은 분쟁 해결을 통한 통상이익 극대화 -또는 손해 최소화- 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FTA 협상을 놓고 보았을 때 양자 간의 통상 분쟁으로 인한 갈등 해소의 과정은 아니다. 쌍방이 합의하여 각각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로를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익의 극대화에서 이익의 범주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또는 전략적- 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를 논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비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어떤 논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도 경제적 이익이 FTA 체결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처럼 인식되어 지고, 대국민 설득에 가장 유용한 수단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제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견해가 존재한다. 특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도 토머스 홉스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에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으로 묘사했듯이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거 제국주의나 중상주의 시대처럼 힘(power)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 현실주의적 측면에서 다시 접근해 보면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힘의 논리라는 것은 존재하고, 이는 물론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논쟁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FTA와 같은 국제통상협상에서 협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판의 여지가 전혀 없다. 중요한 점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밀어붙일 수 없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협상 활동은 과거의 갈등 차원을 강조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라기보다는 협상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협상을 하지 않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추구하는 협력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⁸⁾ 힘의 논리로서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협상이 최근의 협상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한-EU FTA에 도입해보면 앞장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즉, 한-EU FTA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국과 EU 양측 모두 FTA가 체결되지 않을 때보다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지속되던 한국의 대 EU 무역흑자 기조가 협정 발효 후 10년이 지나면 무역적자로 변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 10년 동안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지

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아울러 힘의 논리가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다는 점을 - 비록 상식적이지만 - 도출해낼 수 있다. 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보다 덜 중요한 것을 상대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적인 전개 과정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측은 상대국과의 FTA 협상 과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FTA 체결 이전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과 EU 양측 모두 FTA 체결을 통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다양한 각도로 FTA 협상 결과를 비판하는 경우 어느 특정 분야 또는 항목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FTA 협상만을 전제하여 생각해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자국 국민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과 더 높은 후생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zero-sum이 아닌 Win-Win의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통 FTA를 통해 승자산업과 패자산업을 구분하곤 한다. 승자산업은 대부분 한국의 경제를 주도하는 제조업 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패자산업은 농수산업 등이 차지한다. 이는 한국이 체결한 FTA 중 미국, EU뿐만이 아닌 칠레 등과의 FTA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EU FTA에서 대표적인 패자산업은 축산, 낙농 등 농업부문이다. 10개 국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한국 농업의 연간 생산 감소 예상액은 1776억 원, 특히 이 중 93%가 축산업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돼지고기를 비롯하여, 쇠고기, 닭고기, 가공 토마토 및 포도, 납치류 및 참다랑어류 등에 피해가 클 것으로, 다시 말해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FTA를 찬성하는 집단의 입장도 EU와의 FTA 체결은 농축산업 분야에 많은 피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한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로서 농축산업과 같은 패자산업에 미치는 피해보다 제조업과 같은 승자산업에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 고용 촉진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로 맞선다. 이러한 논리의 바탕에는 근간의 통상 협상은 철저하게 Win-Win 전략에 근거함에 한국도 EU도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일정 부분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논리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앞에서 보였듯이 EU의 입장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한-EU FTA는 서로 자국(EU를 하나의 국가로 가정하였을 때)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 이것이 협상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시한 논거임은 틀림없다.

III. FTA 원칙에 대한 고찰

지난 3년여간 진행된 한-EU FTA 협상과정을 돌이켜 보면 세계무대에서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강한 상대와의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힘의 원리가 작용함을 알 수도 있었고, 한국과 EU 어느 양쪽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협상을 진행했음을 주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협상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큰 틀에서 한국의 EU와의 FTA 체결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체질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듯 보인다. 다른 어느 국가와의 FTA보다 -특히 미국과의 FTA와 견주어 보았을 때- 경제적 이익도 많고, 상대적으로 민감 품목에 대한 마찰도 적었기에 그렇다. 굳이 비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자면,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보다 큰 EU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우호적인 EU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 준다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관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FTA 허브국가라는 한국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EU는 꼭 필요한 FTA 체결 상대 지역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FTA 본질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FTA가 진정한 자유무역의 디딤돌인지, 아니면 방해물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FTA란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과연 한국이 체결한 FTA를 통해 진정한 자유무역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WTO 체제하의 다자간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면서 FTA 체결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WTO 회원국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 아닌 양자 간에만 적용되는 FTA 협정이 각 협정마다 상이하다는 데 있다.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관세 양허 품목 및 기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 많은 부분에서 각각의 FTA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협정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분명히 FTA 협상 대상국마다 다른 경제 및 정치 구조로 양자 관계에 있어서 다른 접근과 협상 상대국가에 따른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어느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한국의 기업들이 이미 발효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정부는 관련 부처 홈페이지나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해 FTA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FTA 체결 상대국마다 동일한 분야에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설령 알지언정 FTA 체결 이전보다 이들의 무역활동에 ‘협정 내용의 숙지’라는 하나의 짐을 더 얹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한-EU FTA에서는 빠졌지만, 한-미 FTA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점에서 여실히 증명해 준다.

진정한 자유 무역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지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FTA에 대한 찬반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찬반 논쟁을 차치하고 현재까지 체결된 FTA를 통해 진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 피해 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이다. 한-미 FTA 체결 직후 마련된 정부의 'FTA 종합 지원 대책' 을 보면 농수산 분야에 대해 2008년부터 10년간 21.1조원(농업 20.4조원, 수산업 0.7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고, 한-EU FTA에 따른 축산 및 낙농업 지원 방향은 올해 11월 중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은 '피해 보전 직불금' 과 '폐업 지원금' 으로 나누어져 있다.⁹⁾

필자는 정부가 주도하여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증가로 피해 산업, 특히 농수산업 분야를 '폐업' 이라는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한국이 왜 쌀을 중요시하여 WTO 다자간 협상이나 한-미 FTA와 같은 양자 간 협상에서 쌀 수입을 저지 또는 늦추려고 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쌀보다 더욱 값이 싸고 맛있는 수입쌀이 들어온다면 한국의 쌀 재배 농가는 점차 명맥을 이어나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식량 안보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을 전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들이 먹지 않으면 된다' 라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한국에서도 와인도 생산되고, 치즈도 생산된다. 그리고 직장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가 삼겹살이다. 현재 수입되는 유럽산 돼지고기도 이미 한국산보다 값도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다. 25%에 달하는 돼지고기 수입관세가 철폐되어 한국의 돼지 농가가 모두 폐업하더라도 우리는 값싸고 질 좋은 유럽산 혹은 칠레산 삼겹살을 계속 즐길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1950년 Viner가 주장한 무역창출(trade creation) 및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와 일맥상통하다. 결론적으로 저렴하고 질 높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어 국민의 후생은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농업 자급률을 기록 중인 한국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폐자산업에 대한 '폐업 지원금' 정책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1.1조 원 중 19.8조원이나 배정된 농수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피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없이는 왜 한국이 EU와 FTA 체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경제적 이익만을 강조한 반쪽짜리 설득에 불과한 것이다. 장밋빛 전망 뒤의 피해 산업 및 그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진정한 FTA의 효과, 즉 국민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다. 아마도 이것이 현 정부가 가장 중요시 하는 '국민과의 소통' 일 것이다.

우리는 세계 경제를 소위 '글로벌 경제' 라고 부른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GATT 및 WTO 체제를 통해 많은 국가는 무역의 자유화를 끊임없이 주창해오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위기 및 WTO 차원의 무역 자유화 논의의 부진은 결국 많은 국가들을 FTA 체결 경쟁 속에 몰아넣

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가능한 한 많은 FTA 체결이 진정한 무역 자유화를 촉진시켜준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기 힘들다.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수출 증진이 국가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은 국민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교역 국가에서 FTA 체결을 통해 그 순위를 한 계단 상승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새로운 FTA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나아가 예상되는 피해 산업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어떠한 지원 대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마련한 후 신중하게 FTA 협상 파트너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FTA와 달리 큰 국민적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던 한-EU FTA가 조만간 발표될 피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따라 국민적 반감을 야기할 수 있는 활화산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10/11/09)



<각주>

- 1) 일본 아시아 경제 연구소의 분석 자료로 매일경제(2010.10.7), '한-EU FTA 몸단 美·日'에서 인용
- 2) 한-미 FTA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한-EU FTA와의 비교에 대해서는 KNSI(2009.11), '한-EU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참조
- 3) 사실상 EU의 경우 EU 의회 승인 후 개별 회원국의 심의 및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개별 회원국 심의 및 승인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과 EU 양측은 EU 의회 승인 이후 잠정발효를 통해 FTA 효력 발생시간을 단축시키기로 합의하였다.
- 4) European Commission, '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10 Key Benefits for the European Union'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0/october/tradoc_146695.pdf)
- 5) CEPII/ATLASS (2010.05), 'The Economic Impac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Korea'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0/may/tradoc_146174.pdf)
- 6) 한겨레 (2010.10.7), 'EU "관세철폐로 수출증가" 환영: '한국이 무역적자 불것' 대조적 분석'
- 7) 보고서 원문은 "[However,] overall employment effects are also very small in Korea."
- 8) 모종린, 최병일(2005), '한국의 통상협상', (서울: 오름), p.16.
- 9) 'FTA 종합 지원 대책'은 FTA 국내 대책 위원회의 FTA 종합 지원 포털(<http://fta.korea.kr/>) 또는 국내 포털 사이트의 Blog 등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대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이외에 각종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을 후원할 수 있으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의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